광주 '과태료 폭탄' 무더기 불복

대선 후보 초청 식사 제공 95명 중 91명 이의신청…평균 73만원씩

법원 심사 결과 관심

"영문도 모르고 먹은 밥 한끼 때문에 수십만원의 과태료는 낼수 없다." "버텨봐야 별 수 없을 텐데."

지난해 8월 대선 예비후보 초청행사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광주지역 인사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태료를 부과한 선관위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처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체 참석자 270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최종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95명. 이중 91명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도 납부도 하지 않아 세무관서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3명이었다. 과태료를 낸 사람은 단 1명으로, 거의 대부분인 94명이 과태료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의 초청강연회와 N포럼 참석자 등 270명. 광주 동구선관위는 두 행사가 열렸던 지난해 8월 5일 오후 행사장인 동구 H 호텔에 단속반을 보내 식사 제공 현장을 적발했었다.

선관위는 강연회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한나라당 관계자와 단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2명은 수사의뢰했다. 또 단속반 비디오 카메라에 식사 모습이 포착된 참석자 95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액은 1인당 평균 73만원으로, 최대 식사비 2만원의 50배까지 부과됐다. 전체 액수만도 6천980여만원에 달했다.

광주·전남에서 대선과 관련 대규모로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이 처음이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식사비를 각자 걷어 후불로 냈다" "선거관련 행사인지 몰랐다" "선거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식사비를 냈다"며 선관위의 조치에 반발했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몰려갔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이 이를 다시 심사해 부과 여부와 액수를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혹을 때려다 혹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에 자신감을 보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인 데다 강연 주최자 측도 이미 지역 내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알려져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측 주장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막가는' 교통 단속

의경이 경광봉 던져 택시 손님 부상

교통 의경이 신호위반을 한 택시를 향해 경광봉을 던졌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다쳐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사는 신모(42)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5분께 동구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가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지원동 한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쳤다. 그 순간 인도에서 경광봉을 든 교통의경이 튀어나와 택시를 제지했고, 운전기사는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자 단속 의경은 경광봉을 택시 조수석 방향을 향해 던졌고, 경광봉은 조수석 창문의 빗물 가리개를 맞았다. 신씨는 깨진 빗물 가리개와 경광봉 파편에 맞아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신씨는 집에 도착해 112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은 '단속 경찰이 내일 전화를 줄 것이다'고 말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사과는 커녕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신씨는 "시민을 다치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경찰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에서 열린 '광주·전남 2차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전략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2차 시국회의

광우병 위험 홍보 주력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주까지 광우병 위험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19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예정돼 있는 이번 주까지 광우병 위험과 장관 고시 반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적인 주제보다는 광우병 위험에 맞춰 논리를 펼쳐야 한다'와 '생활이 정치인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광우병 문제를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미 쇠고기 수입 고시를 앞두고 농성장을 설치해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촛불문화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등지에 반대 현수막을 나눠 주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3일 연속 거리시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집회 주최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 불법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6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 시위 주동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공항 소음 소송 '가속도'

광주지법 4년만에 감정 착수…연내 판결 나올수도

2004년 5월 첫 소송이 제기된 뒤 4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전문감정 진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와 서울지법에서 진행중인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8건. 이 가운데 7건은 광주지법에서, 나머지 1건은 서울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신청자(원고)는 광주가 2만6천987명, 서울지법이 3만1천25명으로 무려 5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제기된 단일소송으로는 사실상 최대 규모다.

법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접수된 소송을 관련 사건으로 보고 해당 사건들을 제6민사부에 배당하는 한편, 광주시와 환경부·국토 해양부·항공안전본부·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유관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확인 조회 및 회신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원고 측의 감정료 납부 지연으로 재판은 수년째 기일 지정조차 못했다. 이런 과정에 지난달 감정료 1억원에 S대 건축과 조모 교수와 감정촉탁 용역계약이 체결됐다. 감정결과는 빠르면 오는 8·9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품 낚시터 도박장 논란

1심 무죄, 2심 유죄…판결 엇갈려

'경품 낚시', 도박일까 아닐까?

신종 도박장 논란에 휩싸인 실내 낚시터의 '경품 낚시'가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7일 낚시터에서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며 "손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기본 2시간당 1만5천원 등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만을 손님들에게 받은 점 ▲낚시를 통해 얻은 상품권은 김씨가 운영하는 낚시용품점과 낚시터 내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행행위 영업이 아니라 재미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도 최근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실내 낚시터 주인 임모(41)씨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일부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은 부수적으로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

김부장은 또 백화점이나 스포츠 경기장의 경품행사, 소정의 시상을 하는 동호회 친선대회 등이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검찰도 사행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사행행위 요건에 의문이 드는 경우 도박개장으로 기소하는 등 비슷한 사건에 각기 다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편의점 강도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심야에 도심 편의점을 돌며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박모(39)씨를 강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김모(3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아낸 뒤 탐문수사를 한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wangju.co.kr

다 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체적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경찰 수갑 고장나 소방서 출동 절단

쌍나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40대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가 잠금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소방서에서 출동해 절단하는 해프닝.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백모(46)씨는 27일 새벽 2시30분께 광산구 운수동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주차돼있는 차를 부쉈다가 주민들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백씨가 붙잡혀온 후에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자 수갑을 채웠는데 이후 열리지 않아 광산소방서 119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출동한 구조대는 수동 절단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수갑을 절단했으며, 경찰은 "어지간하면 고장나지 않는 게 수갑인데 왜 열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쓴웃음.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